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7호

발행일: 2025. 8. 14. (목)

제427회 국회(임시회, 2025. 7. 7. ~ 2025. 8. 5.)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모빌리티 혁신 추진

나.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7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7월 7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1건, 8월 4일~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16건 등 모두 3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7회 국회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별 자율 선택을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충돌 예방 제도를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세입조치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7회 국회의 2025년 7월 23일 및 8월 4일~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7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교육위원회(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의원 등 12인
9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행정안전위원장
1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의원 등 17인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등 10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 등 12인
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등 12인
19	행정안전위원회(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 등 11인
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등 10인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2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2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 등 26인
26	보건복지위원회(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7	국토교통위원회(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의원 등 13인
3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0인
3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원 등 10인
3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2인
3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의원 등 22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모빌리티 혁신 추진,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모빌리티 혁신 추진

개요

정부와 국회는 모빌리티 분야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1-3호 가. 드론산업 육성](#), [제2022-8호 나. 모빌리티 혁신](#), [제2023-3호 나. 첨단모빌리티 활성화](#) 내용 참조). 동시에 신규 교통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는 최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항목과 세출 용도를 변경하여 교통 산업의 시장 안정화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4일 본회의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항목에 여객자동차운송 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명칭을 ‘항공공항계정’으로 변경하여 동 계정의 세출 항목에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u>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u>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5-08-04 (수정가결)

정책 동향

2025년 업무계획(국토교통부, 2025. 1. 13.)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 국민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미래 新산업·新기술 육성
- ◆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 ①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 육성
 - (자율차) 자율주행 상용화(Lv4) 실현을 위한 다각적 실증
 -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개시
 - * (1단계) 운전석 탑승('24.11~) → (2단계) 조수석 탑승('25.上) → (3단계) 완전 무인('25.下)
 - 전국 고속도로(약 5,200km)를 시범운행지*로 지정하여 도심 구간 50km/h → 최고 100km/h의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기술 실증
 - 농어촌, 새벽·심야시간 등 교통취약지역 서비스 확대(4곳 → 7곳)
 - (드론) 모터, 배터리 등 국내 수급을 위한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47→70곳)
 - (UAM)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 다각화 및 사업준비 지원
 - (스마트시티) 기존 도시에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 1개소 선정

출처: 2025년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누리집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성장 기반 구축 15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국토교통 첨단사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 국토교통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위한 규제 재설계 및 정부 지원 확대
 -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
 - 자율주행 스마트도시·4D 지도 등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 재검토로 실증화 토대 마련
 - K-UAM 상용화 추진 로드맵 현실화 및 공항시설·관광·공공을 중심으로 한 실증화 사업 국가지원 확대
-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물류혁명 구현
 -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
-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전기·수소 선박·열차 등) 실증화 지원 및 수소연료 보조금 등 지원 방안 추진
-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의 부품산업, 정비산업, 공항서비스업 등 육성
 - K-공항사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글로벌항공 위상 제고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참고 자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5. 2.

김도읍 의원안: 플랫폼운송사업 기여금 세입 근거 마련 등

[미래모빌리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책 방안 세미나](#) 국회의원 정책자료

[이재명 정부, 교통 모빌리티 정책과 방향](#) 국회의원 정책자료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누리집

[플랫폼 운송업체 총량 상한 두지 않기로...매출 5% 기여금 내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 3. 20.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교통이자 도시교통인 UAM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서비스 모델을 논의하고, 버티 포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향후 개정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더불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50 지속 가능 모빌리티를 위한 국가 장기 R&D 로드맵 구축](#)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2025.4.30.

본 연구의 목적은 모빌리티 분야 국가 장기 R&D 로드맵을 통해 미래 교통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도시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 교통 혼잡 및 각종 도시 문제들이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시스템의 효율을 증진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나.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개요

2023년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하여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교과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개정·시행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르면 “교과서”의 정의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인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AI 디지털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학습데이터 수집의 범위, 수집된 학습데이터의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된 바 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였습니다. 교육 자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 환경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4일 본회의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교육위원회	<u>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2025-08-04 (수정가결)

정책 동향

2025 정부 업무보고(교육부, 2025. 1. 10.)

② 디지털 기반 맞춤형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초1~고2)을 통해 학년 초 진단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바탕으로 AIDT와 연계한 수준별 학습 추진
 - ※ AIDT 번역기능을 활용하여 다문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
 - 책임교육학년인 초3·중1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AIDT 학습분석을 통해 학습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교과보충·튜터링 등과 연계 지도
 - * 책임교육학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고
 - 초3 대상 선택형 늘봄 프로그램에 ‘AIDT 활용 보충학습’을 개설하고, 중등 방과후학교 내 AIDT 연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과목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위한 학습자 분석·지도와 수준별 콘텐츠 제공에 AIDT 적극 활용
 - AIDT를 활용하는 연구학교·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AIDT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활용 지원
- 교원의 AIDT를 활용한 학습설계 지원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체계에 따른 교실혁명 선도교사연수(115만 명) 및 일반교원(6.6만 명) 연수, 찾아가는 학교컨설팅(3천 교) 추진
 - 연구대회, 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AIDT 활용 우수사례와 수업 영상을 발굴하고 ‘수업의 숲’을 활용해 우수사례 확산
 - AIDT를 활용한 우수한 수업콘텐츠와 교수학습설계 제작을 독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교원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

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부 누리집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잘못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개편

-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혼란 해소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
-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플랫폼 구축

-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해 학습이력 추적
- 초·중등학교,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 교육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 체계 마련
- 교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사·반복 업무의 AI 활용 추진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참고 자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2025. 6.

고민정 의원안: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 등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이승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생각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공약 이행방안 검토 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 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4. 8. 20.

□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 이를 유보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동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 59.6%가 공감하고 있으며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국회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한 난제를 풀어야 할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용도서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불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1949년부터 사용된 “교과용 도서”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 자체가 명확히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명칭 자체를 정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우선 “교과용 도서” 대신 “교육 자료”로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용 도서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만큼, 새로운 정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적 결정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AI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기대와 우려 속 미래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의제 24-01 2024. 8. 30.

정부는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한계를 인식,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사교육비 절감 등 AI로 야기될 교육 혁신에 주목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I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선도하여 교육의 공정성(equity)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효과에 대한 의문, 낮은 완성도,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미래 교육 혁신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AI 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을 위한 AI 교육법에 대한 논의도 검토하고자 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